

투자자 이탈에 거래량 절반 ‘뚝’... 코인거래소, 전망 ‘암울’

〈전월대비 일일거래량〉

가상자산거래소 ‘보릿고개’

올해 매출 하락폭 전년보다 클 듯 거래소 5곳 일일거래량 18억 달러 시총 역대최대 작년 10월의 20% “법인거래 허용·규제완화 등 수익성·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올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거래소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이 하반기로 밀려나면서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 업비트(두나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직전연도 대비 27.9% 감소한 70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수수료 수익도 함께 줄어든 영향이다.

같은기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소 이익도 줄어 들고 있다.

/뉴시스

율 2위 빙썸은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및 총 매출액은 2024년 대비 늘었지만, 이자비용을 비롯해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가격에 따른 처분손실이 반영되면서 총 당기순이익은 줄었다.

점유율 3위 코인원의 경우 2대 주주인 컴투스홀딩스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3억2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3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벗어났다. 점유율 4위 코빗과 5위 고팍스는 아직까지 별도의 공시가 없지만, 다년간 적자를 지속했던 만큼 지난해에도 적자를 지속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순이익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던 2024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올해는 매출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전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량도 크게 줄어서다.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17억 72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며,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약 20% 수준

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매출의 약 97%를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국내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부재로 레버리지 거래를 비롯한 파생상품 취급도 제한적이다. 업권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파생상품인 ‘코인 대여 서비스’도 지난해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속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도 거래소들에는 고심거리다. 해외 거래소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거래로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가격 안정성이 높으며, 파생상품 취급도 국내 거래소보다 자유롭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100만원 이상 이전(출고)된 자금 규모는 168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만 90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같은해 상반기 대비 유출액이 14%나 늘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여당을 중심으

로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현실화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논의 중에 있지만, 당초 지난해 입법을 목표로 했던 해당 법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일정이 늦춰졌다. 정부와 여당 간에 규제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동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며 논의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다.

더군다나 최근 논의중인 내용에는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입법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이 나오는데, 매출을 전적으로 수수료에 의존하는 거래소의 영업환경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거래 허용을 비롯한 수익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업권에서도 좀처럼 전략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금융·통신·수사 ‘원팀’... 보이스피싱 ‘차단’

금융위,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의심거래 정보공유 기관·범위 확대 계좌·거래내역 등 공유정보 구체화

보이스피싱 대응에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나선다. 기관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대폭 넓히고,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회사·수사기관·통신사에 더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 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포함했다.

공유 정보도 구체화한다.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는 물론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까지 폭넓게 공유한다.

아울러 의심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도 도입한다. 해당 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 설비와 전문인력, 내부통제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기관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통신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분석한 뒤 다시 각 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추적하며, 통신사는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기존 본인확인조치 규정은 폐지한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별도로 정비해 체계를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 등 분야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선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심계좌를 신속히 탐지하고 지급정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분상제 적용 ‘이촌 르엘’ 9일부터 청약

총 750세대 규모... 88세대 일반분양

전통 부촌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단지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이촌동에서 리모델링으로는 첫 일반분양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촌동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이촌 르엘’이 오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단지는 이촌동 301-160 일원에 지상 최고 27층, 9개 동, 총 7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88세대를 일

반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100㎡ 22세대 ▲106㎡ 24세대 ▲117㎡ 13세대 ▲118㎡ 12세대 ▲122㎡ 17세대 등이다. 전 타입이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교통 여건은 서울 도심과 강남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단지 인근의 이촌역을 통해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등을 통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이촌 한강공원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적

용돼 한강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25m 길이 3개 레인을 갖춘 실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인 ‘프라이빗 시네마’와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닝 카페도 마련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촌 르엘은 강북권 첫 르엘 단지”라며 “강남에서 축적된 브랜드 노하우와 한강변이라는 탁월한 입지가 결합해 용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229만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전 평형이 중대형이라 절대적인 분양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 생산·투자 뒷받침 ‘생산적 금융’”

김헌수 보험연구원장, 취임 간담회 “성숙기 한국 보험산업, 성장 가능”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을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은 위험에 노출된 기업과 개인을 보호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을 단순히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생산 기반을 떠받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성숙시장에 접어든 한국 보험산업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고령화와 돌봄, 사이버와 AI 등 이전에 없던 위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험의 역할 역시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그 성장은 외형 확대가 아니라 건전성과 수익성, 성장성의 균형을 회복하는 ‘건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날 올해 보험산업이 저성장,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소비자보호 과제,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 방향을 경영 대응, 정책 대응, 소비자보호의 3개 축으로 구성했다. 단기 현안과 급변하는 정책 이슈에도 수시 과제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대응 분야에선 불확실한 금리 환경과 자본 부담에 맞춘 ▲자산·부채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관리(ALM) ▲금융재보험 활용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영향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재점검하고 자본관리와 수익성 방어에 도움이 되는 실증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보험영업 제도와 활용 사례 ▲사이버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과징금 제도 개선 ▲보험산업 전환 금융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험회사의 역할 ▲정년연장이 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전환, 자본시장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구현할 제도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건전성과 혁신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gh471@